■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골프·해양레저 키워 해외소비 '국내로'

농민 농지출자, 부담금·세금 감면 등 지원

해양스포츠 정착위해 마리나 항 등 확충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레저 수요를 잡기 위해 대중 골프장과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을 집중 육성한다.

부담금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농민이 농지를 현물 출자하는 형태의 골프장 사업을 유도, 골프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상레저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도 줄인다.

◇농지에 대중골프장 지으면 세제 혜택= 정부가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을 여러 개 건설함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골프장 수가 19만3천명당 1개꼴로, 미국(1만6천명), 일본(5만2천명) 등에 비해 크게 적은 데다 제주도 1인당 골프투어 비용이 2박3일 54홀 기준 약 110만원으로 중국, 태국, 일본으로 나가는 것보다 약 15만~30만원 비싸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골프 여행에 쓴 돈은 11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중골프장 공급을 늘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부담금·세금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농민이 소유 농지를 자발적으로 현물 출자해 주식회사를 결성, 건설회사·골프장 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현재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회사의 법인세,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또 샤워실 등 부대시설, 카트 등 운영시설의 설치를 자율에 맡겨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지금까지 골프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발업자가 산지 등을 직접 사들여 깎아 부지를 조성하고 각종 부대·운영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늘어 결국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회원제 운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골프장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원칙대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현행 관리지역이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농지는 골프장 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지역내 농지는 70만ha며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는 이 가운데 절반인 35만ha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 안에 '체류형'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별로 최대 400억원 한도 안에서 진입도로의 사업비 가운데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크루즈·요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도 키운다=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해양 관광·레저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3천여개의 섬과 360여개의 해수욕장, 1만2천㎞에 달하는 해안선 등 천혜의 자연 환경에도 불구, 국내 요트 계류시설이 3개(부산·통영·진해) 뿐이고 크루즈 기항 전용 부두도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국가차원에서 레저용 보트 등의 정박시설과 함께 다양한 관광·레저 서비스 기능을 갖춘 '마리나'항 공급을 늘린다. 현재 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지역별 개발 방향·규모·주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별 소규모 마리나 개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사업으로 지원한다. /연합뉴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내용

해양레저 선박 항행구역 연근해로 확대

관광단지내 전력공급 설비비 전액 보조

정부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반값 골프장 등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담을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다음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 내용.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농지를 현물 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담금과 세금 감면, 부대시설 설치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건설비용 절감 및 수익성 확보를 도모한다.

-고급 해양 관광레저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 2008년 하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양레저스포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현재 평수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길이 12m 미만의 해양레저선박 항행구역을 11월부터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확대한다. 수상레저 기구 보유자가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공제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크루즈산업 육성기반 조성= 국적 크루즈 선사가 선박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이 용이하도록 노사간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최대 8명까지 가능한 외국인선원고용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1개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여수항, 제주항 등 6개 무역항(8개 선석)으로 확충한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IT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IT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RFID/USN 시스템, RFID Dongle(모바일 터치결제 단말기)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기업에서 활용되는 지하매설물 관리 로봇, 청소서비스 로봇, 수술지원용 로봇 등도 산업용 로봇에 포함해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D 투자확대 촉진

▲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연구개발지원업을 포함=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지원업을 포함해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까지 세액 공제한다.

▲서비스산업 R&D 투자지원 확대= 서비스 R&D 활동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업 중심의 기존 R&D 개념을 재정립해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업종별 단체 주관의 직업능력개발 실시 = 고용보험을 통해 업종별 단체가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30개 이상의 중기와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훈련비 외에 시설·장비,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추가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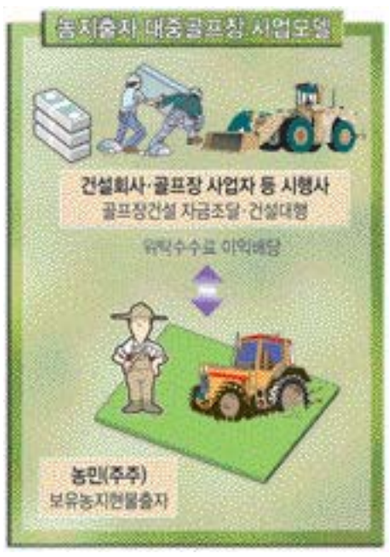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 지속 추진

-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송·광고=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한다. 우선 방송영상산업의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해 올해 말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통신= 시내, 이동, 인터넷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 역무를 단일 역무로 통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역무통합에 따른 선발사업자(KT, SKT)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매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불합리한 제도의 추가개선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 관광단지에도 산업단지와 같이 일반전력공급 설비비용을 한전에서 전액(단, 지중의 경우 50%) 보조한다.

▲소규모 민간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지원 = 민간이 조성한 소규모 관광자원에 대해 기반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민간 관광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유도한다.

▲관광식당업 지정 및 관리기준 개선= 관광식당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 중 실시해 관광식당업 제정기준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연금액 평균 3.3% 올려

수급자 28만명 7월분부터 혜택

재정안정 목적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과 더불어 그간 불합리한 점으로 비판받던 연금지급제도 역시 대폭 개선되면서 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3일 국민연금 개정법 시행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수급자 28만여명이 당장 7월분부터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10년 이상~20년 미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수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이른바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6만 여명이 이달부터 수급자별로 평균 3.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총 34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1만3천여명도 총 36억원의 연금액이 7월부터 지급되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재혼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7월부터 지급받게 됐으며, 조기 노령연금수급 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휘발유 공장도가 ℓ당 40원 거품"

정유사, 주유소에 넘긴 가격보다 부풀려 발표

정유업체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 제품 가격이 그간 정부와 석유공사의 집계치보다 ℓ당 40원 가량 쌌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자원부가 유류제품 가격고시 제도를 개편한 뒤 30일 처음 발표한 '6월 석유제품 실제판매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정유사들이 대리점과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 실제 세전 가격은 ℓ당 563.32원이었다.

그간 정유사들의 보고에 의존해 집계한 공식 공장도 가격은 6월의 경우 ℓ당 603.26원으로, 실제치보다 39.94원이 부풀려진 상태였다.

이 수치는 정유사들의 실제 매출액과 판매물량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으로 앞으로는 매월 말께 전월의 실제 판매가격이 공개된다.

실제 판매가와 그간 집계된 공장도 가격이 차이를 보인 것은, 정유사들이 대리점 또는 주유소의 위치나 판매량, 경쟁사의 동향 등을 감안해 대외적 공식가격보다 할인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이 공개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넘기는 이른바 '백마진'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석유제품시장의 투명성과 공장도 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휘발유 외에 경유의 실제 판매가격도 ℓ당 532.61원으로, 공식 집계치 610.45원에 비해 77.84원 가량 낮았다. /연합뉴스

韓, 미·중·일 3개국과 무역 고전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과 무역흑자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3개국과의 교역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대폭 늘어나 올해도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28억3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줄었지만 수입은 277억1천300만달러로 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대일 무역적자는 148억7천6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2%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전체 대일 무역적자는 300억달러 안팎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적자 폭 253억3천1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대일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기술·부품·소재 등의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엔화 약세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올라가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수출은 379억5천7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6.6%, 수입은 299억2천300만달러로 33.6% 각각 늘어났다.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은 230억9천600만달러로 9.4% 늘어났고 수입은 184억7천1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2.8%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46억2천5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3% 감소했다. /연합뉴스

두산, 사상 최대 해외 M&A

美 중장비업체 3개부문 4조5,000억에 인수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은 미국 뉴욕에서 박용만 부회장과 미국의 중장비업체인 잉거솔랜드(Ingersoll Rand)사 허버트 헨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잉거솔랜드의 소형 건설중장비, 어태치먼트, 유틸리티 등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한화 약 4조5천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추진한 기업 M&A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잉거솔랜드는 세계 1위의 소형 건설중장비 업체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인수로 인해 건설 중장비 부문에서 글로벌 7위권 기업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은 이번 인수를 위해 해외 법인을 공동설립하며, 인수 금융 작업에는 한국산업은행도 참여하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한 잉거솔랜드사의 3개 사업 부문은 미국, 유럽 등지에 2천700여개의 딜러망을, 6개국에 16개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작년에 매출 26억 달러, 영업이익 3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잉거솔랜드사의 소형 건설 중장비 사업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38%, 43%에 달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중대형 건설중장비 사업군에 소형 장비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건설장비 사업 폴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 /연합뉴스

코스피 급반등… 1,900선 회복

기관 매수세·中 증시 급등 힘입어… 추세 회복 단정 일러

30일 코스피지수가 급반등하며 1,900선을 회복했지만 전문가들은 상승 추세의 회복보다는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49포인트 상승한 1,906.71으로 마감해 26, 27일 이틀 간 120포인트가 하락한 급락장세에서는 다소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2.13포인트 상승한 794.19로 마감됐다.

이날 오전 한때 1,860 이하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급반등할 수 있었던 데는 기관의 매수세와 중국 증시의 급등 소식 영향이 컸다.

외국인이 정규장에서 5천615억원을 매도하며 11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펼쳤지만 기관은 4천679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이에 맞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냈다.

13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이 11거래일 간 4조7천77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기관은 같은 기간 2조3천638억원을 순매수하며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펀드 수탁고는 262조7천169억원으로 1999년 7월 22일 세운 종전 기록 262조5천660억원을 넘어 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주식형 펀드 수탁고도 72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더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날 2%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초로 4,400선을 돌파, 지난달 3,400선까지 떨어졌던 조정장세에서 완연히 회복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장세가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좀더 장세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증시 전문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글로벌 신용경색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이슈이다"면서 "선진국 시장이 신용경색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